

■ 여야 방송법 재투표 ‘무효 논쟁’ 기열

“법적 문제 없어” Vs “일사부재의 위배”

민주,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 청구
신문법 대리투표 싸고 의혹 제기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한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재투표 효력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 미디어법 직권상정 후폭풍은 법정공방으로 확대되면서 불씨가 커지고 있다.

23일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의사봉을 잠은 이윤성 국회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재석 294명, 재석 145명’으로 집계돼 표결 성립을 위한 ‘재석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 사실상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이날 헌재를 방문한 민주당 김종철 의원은 “방송법 법안에 대한 표결 개시와 실질적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뤄졌고, 국회의

장의 표결 종료 선포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완료됐다”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돼 이번 회기에는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나 제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며 “무효인 법률이 시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시급히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어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도 보도자료에서 “과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미디어법의 통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의원과 재투표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다수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신문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각각 기권과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일부 의원들이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으나 투표 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리투표를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해 기권

을 한 것으로 돼 있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표결을 해 항의했더니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재창 원내대변인은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160명 이상 참여했는데 대리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표결을 많이 방해당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디어법 강행 처리 민주주의 말살”

김효석 강경투쟁 선언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김효석 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분노를 터뜨리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2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미디어 악법의 통과를 알리는 방망이 소리를 들으며 1백년 전 장지연 선생이 을사늑약에 항거하며 토해냈던 ‘시일야 방송대곡’을 떠올렸다”며 “7월 2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악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폐기된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진리로 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국민 속으로 나아가 국민과 함께 미디어 악법의 무효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망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데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미디어

악법 처리에 이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정권과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제2, 제3의 악법이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칠 것”이라며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악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폐기된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진리로 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국민 속으로 나아가 국민과 함께 미디어 악법의 무효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디어법 사태 전략적 대처해야”

박주선 의원 지적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직 총사퇴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주선 의원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일축,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그에 맞는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의원직을 사퇴

하면 미디어관련법 폐지, 비정규직 문제, 쌍용차 사태 등 현안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과 함께 하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이번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연차 돈 받은 정치인 8명 더 있다”

美서 돈 전달 측근 진술

미국 뉴욕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며 박연차 전 대법실업 회장의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는 23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정치인이 더 있지만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증언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박씨는 서 의

원측 변호인의 증언신문 과정에서 “1982년경부터 박 전 회장과 친분을 쌓았으며, 크고 작은 돈 심부름을 해왔고 2003년 이후 박 전 회장으로부터 45만달러를 송금받아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돈을 전달한 정치인이 더 있느냐는 서 의원측 변호인의 질문에 “정치인을 포함해 10여명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실제로 돈을 건넨 정치인은 기소된 서 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에 더 있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또 2006년 여름 김 교수란

사람을 포함한 서 의원 일행이 맨해튼 소재 식당을 방문했을 때 서 의원을 따로 불러 봉투에 미화 2만달러를 담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만달러 수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해온 서 의원은 “김 교수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의 변호인은 박씨가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관리해온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박씨는 증언 도중 진술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홍장표·최옥철 의원직 상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무소속 최옥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잇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13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박연대 소속이었던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진동 당

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부패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박흥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다목적 에너지 절약장치, 특허 기술-에너지 절약

IPSECT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1.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2.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3.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4.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5.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6.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7.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 8. 방수·단열·에너지 절약장치

www.ipsct.com

연기/냄새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설치 후 100% 민원해소율

YHB

www.yhb.co.kr